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성명서]

2020. 11. 10. (화)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지역방송 정책 이대로 후퇴? '좌고우면. 부화뇌동' 사장은 자격 없다!

양승동 사장 체제 들어 추진돼 온 지역방송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본질은 사장 본인의 의지에 있는 듯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지역방송국에 대한 TV사업 변경 관련 심의 허가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해 왔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정치권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左顧右盼)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양승동 사장마저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방송 정책의 방향타를 쥔 주무 부처와 KBS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흔들리니 KBS 지역방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경영진 내부에서는 수신료 인상 정국에서 7개 지역방송국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할 만큼 했으나 역부족이니 뒤집자는 것인가? 지역방송 정책이 전환되면 수신료 인상은 보장되는 것인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 실패했을 때, 방향성 잃은 지역정책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지역방송 정책은 수신료 인상의 레버리지로 이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의지박약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광역제작과 광역송출에 기반 한 지역방송 정책이 후퇴한다면 KBS 지역방송에 미래도 없다. 현재 지역뉴스는 '코로나 19 재난방송체제'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광역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이미 지역 취재 및 촬영기자는 총국 소속으로 배치됐지만 뉴스진행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 요원들은 지역방송국에 잔류하고 있다. 인력배치와 송출이 기형적인 형태이다. TV사업 변경허가가 지연될수록 지역뉴스7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광역제작과 광역송출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편성제작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마른 수건 짜내며 버티기에도 한계를 넘어섰다. KBS 지역방송 정책은 수신료를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KBS의 핵심정책이어야 한다. 지역총국 중심의 광역제작 광역송출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이다. 올해 7월 KBS본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 전체 조합원 74%, 지역 조합원조차 70% 이상이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지역정책의 방향성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다룰 사안이 결코 아님을 거듭 밝혀둔다.

이에 KBS본부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KBS 지역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차질 없는 완수에 다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라. 좌고우면(左顧右眄), 부화뇌동(附和雷同)의 경영이라면 사장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라!

2020년 11월 10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